

소통으로 새로운 교육세상 열 것



6 · 13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전북 도내 교육감선거가 함께 이뤄진다.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현 교육감에 맞서기 위해 6명의 예비후보들이 도전장을 냈다.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는 황호진 전 전북도교육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 이미영 전 대통령지문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도내 여러 시군을 돌며 민심을 듣고, 지역교육 현안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집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서거석·천호성 예비후보에 이어 황호진 예비후보를 만나 정책과 소신, 철학 등을 들어봤다.



교육 옥죄는 불통행정 청산돼야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성취평가제로 도내 학생들 학력 키워나가야

'질문하는 능력' 기르는 교육 전환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해서라도 교과지식 이해·활용 형태 변화야

학생들의 진로 스스로 찾아가도록 전북을 진로교육특구 지정 노력

유아교육부터 고교까지 내년부터 전면무상교육 실시할 것

Q.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계기는?

A.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소통으로 새로운 교육세상을 열겠다"는 말로 출마이유를 밝혔다.

학교 현장의 환영을 받으며 시행되던 많은 사업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되는 교육적폐를 보고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

전북교육을 옥죄는 불통행정은 청산돼야 한다. 전북교육의 수장을 교수 출신이 계속 맡으면서 전북교육은 시행착오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분명한 비전, 정책 역량과 실행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북의 미래를 만들겠다. 학생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

Q.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처음 시작했을 때와 사뭇 다른 느낌이다. 제가 처음 뵈는 분들인데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시며 파이팅을 외쳐주신다. 교육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안다. 정말 바꿀 수 있다는 도민들의 열원이 현실화 되면 본 선거에서는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후보를 고민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

Q.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속 5년간 도내 중고교생의 기초학력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A. 전북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학업성적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예산 확보와 학생 수준별 맞춤학습, 그리고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성취평가제 실시를 통해 전북학생들의 학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1대1 맞춤학습 등 다면적 지원을 강화가 중요하다.

일제고사 방식이 아닌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성취평가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Q. 진로정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A. 교육부 재직 시절에는 직업교육훈련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소위 '직업교육 3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만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정답을 맞히는 교육'에서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에는 사회 전반에 초역명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교육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지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수업의 시수보다는 수업의 질이 중요하다. 삶의 가치와 방향을 깨닫게 하고 자기주도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학교다.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미래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논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답을 찾아내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적절한 '질문'을 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최근 서울지역 사립대에서 정시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과 출세우기를 조장하고, 선다형 문제풀이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으로 개혁을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수능중심의 정시 확대 정책은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생들마다 다양한 재능과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단순히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 차원을 넘어선 평가시스템이 변경되어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상대평가제에 의해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내신등급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후퇴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학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대학교육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프라임 정책을 고등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협소한 분야에 한정된 특수목적형태의 드문고등학교 설립공약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특정 재능의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며 인기영합에 매몰된 학교에 입학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졸업 할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안으로 ▲코딩교육 등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진로체험 특화교육 활성화 ▲내신

절대평가제 기반의 고교학점제 안착 ▲ 창의성, 예술, 공감능력 향상 교육 ▲교육특구와 지역경제를 연계해서 지역인재양성 등 지역사회발전과 맞물려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을 대한민국 진로교육특구로 지정해 우리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전교조의 노조 전이 허용과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한 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A.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교육적폐 청산의 상징이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단체에게 부여된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를 통해 교원단체의 자유롭고 차별 없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사도 복직시켜야 한다.

Q. 학생인권예 비해 교권이 위축돼 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A. 교육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민주적인 화교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학생인권정책은 학생인권예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고 실패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 한마디로 학생인권이 된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첫 단추를 잘못 잡았으므로 교권이 위축된다는 여론이 많아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공동체적이고 신분적 인권의 개념인 학생인권예 배타적인 개인의 권리를 학생인권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이라면 교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권확립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로 학생인권을 무기화 했다. 학생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조사를 남용했다. 이것이 학생인권예 대해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학생인권을 잘못되게 정책을 실행하고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은 또다른 잘못을 자행하는 것이다.

학생자치기구의 자정기능을 신뢰해야 하며 학생자치권 확대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이 학교폭력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생기면 교권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리고 교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다. 수업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권리이다.

Q.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 된 공약이 있습니까?

A. 내년부터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비 고통없이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계적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을 국공립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교육의 첫 출발점부터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실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적으로 소외돼 있는 만큼, 무상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부 과장, 전북 부교육감, OECD 교육으로 일하며 교육이면 교육, 행정이면 예산확보 모든 것에 능력을 갖췄다. 기대하셔도 좋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 학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전북에서 무상교육,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교육행정전문성과 예산확보의 '능력자 황호진'이 되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한다. /이삼민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감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위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연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한국)

홍보대사 류수영